

與·野 재난지원금 합의에 국민의힘 내홍… “핀셋 지원 위배”

여야, 재난지원금 100% 지급 합의
윤희숙 의원 “당 소속 의원 동의 無”
이준석 대표 “당론, 선별지급” 해명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잠정 합의한 ‘재난지원금 100% 지급’ 방침을 두고 거센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그동안 당에서 정한 ‘핀셋 지원’ 방침을 위배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 때문이다.

13일 메트로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해보면, 이 대표는 전날(12일) 송 대표와 서울 여의도의 한 한정식 집에서 만난 가운데 ▲지구당 부활 합법화 ▲전 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방향 ▲여·야·정 협의체 가동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 ▲TV토론 동반 출연 ▲당대표 모임 정례화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즉 100% 지원 방침에 대해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거센 것이다. 3선 중진인 조해진 의원은 전날(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비판했다.

그는 “우리 당의 기존 입장은 (재난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원금 100% 지급에) 반대”라며 “전 국민 지급을 통한 소비 촉진은 코로나 방역에 역행하는 것이고, 소득재분배에 역전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윤희숙 의원도 SNS에 올린 글에서 재난지원금 100% 지급을 ‘대표 행위’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가 당 소속 의원들 동의 없이 송 대표와 재난지원금 100% 지급에 잠정 합의한 데 대해 ‘제왕적 당대표’라며 몰아세웠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에 하태경 의원은 이 대표 옹호에 나섰다. 하 의원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국민 100% 재난지원금 제공은 (여야 대표) 합의 사항이 아니었다”며 “남은 예산에 대해 80% 지급 경계선 문제, 행정비용 문제가 있으면 비율을 늘리자는 민주당 제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조건부 검토”라고 말했다.

당내 반발이 거세지자 당 지도부도 사태 수습에 나섰다. 이 대표는 13일 라디오 인터뷰, 기자들과 질의응답 등을

통해 잠정 합의한 내용에 대해 반복했다.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한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지원이 당론”이라고 해명했다.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 대표는 “우리는 추경 증액에 항상 반대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3조9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경 총액이 늘지 않으면 국민 지원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1인 기준 재난지원금) 20만원 지급 등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대표는 전날(12일) 송 대표와 회동에서 ‘재난지원금 100% 지급’ 잠정 합의를 두고 “정치적 입지를 고려한 것”이라며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못하면, 저희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원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원 합의는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당은 종전과 같은 입장으로 추경 심사

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여성가족부·통일부 폐지 주장부터 재난지원금 잠정 합의 등으로 당내 갈등에 휘말린 점과 관련 ‘이준석 리스크’ 지적이 나오자 김 원내대표는 “그걸 리스크라고 말하는 거 자체가 호사자들의 말”이라며 “각자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역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 최우선 고려사항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분에게 ‘핀셋 지원’ 하는 것”이라며 “우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대상을 두텁게 하고, 남은 재원이 있으면 전 국민까지 지급을 확대하는 게 취지”라고 해명했다.

한편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전날(12일) 합의는 ‘소상공인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해보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원내에서 의논해야 한다”며 “양당 대표가 공감했지만 각 정당의 내부 사정이 있으니 논의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韓日 신경전에도 文, 대화 의지 “성과 있어야” 신임 법무부 차관에 강성국 법무실장 내정

정상회담 관련 양국 실무협의 진행중
靑 “日 측 태도 중요” 전제조건 제시

한·일 정상회담 형식과 의제 등을 둘러싼 ‘신경전’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과의 대화 의지를 놓지 않는 모습이다. 신경전과 별개로 정상회담 관련 양국 간 실무협의를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 참석을 계기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가질 용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징용 피해자와 위안부 문제, 일본 수출규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등 한·일 정부가 논의해 풀어나가야 하는 현안이 산적하기 때문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최근 스가 총리와 대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다. 지난 5월 영국 콘월에서 열린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당시 문 대통령은 스가 총리와 만남이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청와대 본관에서 미 의회 코리아스태디 그룹(CSGK) 대표단을 접견,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스가 총리와와 첫 대면은 한일관계에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지만, 회담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지난 12일 “우리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을 가질 용의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담이 개최되면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향

후 일본 측 태도가 중요하다”며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본지와 13일 통화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 역시 “이번 주에 물밑 실무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협상) 결과에 있어 요구하는 성과가 있어야 한다”며 일본 측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 정부가 정상회담 타결 차원에서) 서로 조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조율이 잘 돼 결과가 있으면 (문 대통령이 일본에) 가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일본 측 태도 변화가 없고, 회담 성과가 없다면 어려워질 수도 있다”며 정상회담 불발 가능성도 언급했다.

청와대 입장을 종합하면 ‘성과’가 전제된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것으로 본 셈이다. 일본 정부가 ‘의제 없는 1인당 15분 회담’, 방위백서 내 ‘독도 영유권 주장’ 등에도 청와대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

/최영훈 기자

한달 여 만에 후임 인선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강성국 법무실장(사진)을 내정했다. 임명일은 오는 14일이다. 전임인 이용구 전 차관이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돼 지난 6월 사의를 표한 뒤 한달 여 만에 후임 인선을 마무리한 것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강성국 실장을 신임 법무 차관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강 신임 차관은 전남 목포고, 고려대 법학과 및 법학 석사를 거쳐 사법고시 30회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법무법인



(유) 지평 변호사 등을 지낸 뒤 현재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재직 중이다.

박 대변인은 강 신임 차관에 대해 “서울 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2020년 7월부터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재직해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탁월한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무·검찰 개혁, 여성·아동 범죄정책 등 법무부 당면 과제를 차질없이 적극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영훈 기자

文, 오늘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주재

발전·보완 전략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한다. 지난해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 발표 이후 1년이 지난 만큼 그동안 성과를 돌아보고, 발전·보완한 전략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번 회의는 ‘한국판 뉴딜 2.0 - 미래를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흥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

정부 장관,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등이 함께 한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의 기조연설에서 ‘한국판 뉴딜 2.0’을 선언할 예정이다. 이어 흥남기 부총리가 한국판 뉴딜 2.0 세부 정책 방안에 대해 보고한다. 이와 별도로 ▲한국판 뉴딜 소개 ▲정책 노력 ▲현장 우수사례 소개 ▲뉴딜 관련 산업계 전략 및 투자 방향 보고 등이 이어진다.

/최영훈 기자

이번 회의에 대해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1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사회 구조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2.0’을 국민에 보고하고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소개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4차 대유행 상황을 고려해 참석자 규모는 발표자만으로 대폭 축소된 점, 참석자 사전 PCR 검사, 사전영상 촬영 통한 현장방문 최소화 등 방역지침 준수 후 진행할 예정이라는 점도 전했다.

‘국민의힘 4선’ 박진, 대선 출마 선언

“수출 시장 다변화하겠다”

박진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13일 “내치(內治)는 물론 외치(外治)에 있어서도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과 비전을 갖춘 대통령이 당선돼야 한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4선 중진인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술패권주의 속에서 우리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세일즈 외교를 지도자가 바로 선진국형 대통령”이라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정 여젠다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대외적으로) 한미동맹을 정상화해 손상된 신뢰를 회복하고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겠다”며 “일본



과는 미래지향적 관계를 모색하며 북한은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예측 가능한 남북관계를 발전 시켜 나가겠다”며 주요국에 대한 외교관을 제시했다.

내치와 관련 박 의원은 ▲포용의 정치를 바탕으로 정치의 선진화 ▲선진국형 경제 패러다임 구축 ▲일자리 주도 성장 ▲인재 혁명을 위한 학제 개편 ▲기후 위기 대응 ▲과학기술 선진화 등을 주요 비전으로 내세웠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출마한 훌륭한 대선 후보들과 함께 상생하는 경선을 펼치고, 필승하는 단일화를 만드는 데 앞장 서고 내년 정권 교체에 위해 국민의 염원을 담아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태홍 기자